

시론



김영집
광주대 교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전문위원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제정되고 이제 특별시장, 시장, 구청장, 군수, 시·군·구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다가왔다.

첫 통합특별시의 대표를 선출하는 일은 지역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일이 나라의 성장과 쇠퇴를 가르듯,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전남광주의 미래가 달라진다.

민주당 절대 우위의 지역이라 민주당의 경선 열기가 뜨겁다. 그러나 지난 보궐선거에서 보이듯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나 견제를 이유로 조국혁신당, 진보당, 정의당, 무소속 등의 진출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방선거에서 지역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도 관심이다. 지난 지방선거 때 광주시의 낮은 투표율은 뻔한 민주당 후보에 대한 실망 때문이었고, 지방 정치인들의 대표성이 인정받기 어려울 정도였다.

아무래도 새 통합시 선거인 만큼 다른 때보다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을 것이다. 시민들은 모두 통합시의 성공을 위한 가

통합특별시 리더의 조건

장 적절한 리더를 기대하고 있다.

이제는 물 건너간 일이 됐지만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통합시장으로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나 김경관 산업부 장관의 이름이 종종 회자됐다. 이들을 유치해 보려는 일부 오피니언 리더들도 있었다.

이제는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재 지역 정치인들에 대한 일정한 불신과 만족하지 못하는 여론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새로운 인물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른바 천명 강풍은 없다.

민주당은 통합특별시장을 비롯해 지방의원, 군수, 시장, 구청장 후보들을 잇따라 선출할 예정이다.

필자는 지난 지방선거 때마다 리더십을 중요하게 보고 관료형과 정치가형 리더십, 권위형과 민주형 리더십, 행정형과 경제형 리더십을 구분해 분석하고 평가해 왔다.

특히 이번 통합특별시장의 리더십은 정치가형, 민주형, 경제형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며 첫 특별시의 정치적 위상을 높여야 하고, 광주전남 성장의 절호의 기회를 경제·산업적 성공으로 이끌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 말할 필요도 없지만 광주전남의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민주도시로 성장시켜 대한민국 민주정권을 굳건히 유지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치 지도력도 필요하다.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처럼 정치와 행정

은 물론 일을 잘하는 리더가 필요하다. 관료 보다는 경제를 잘 알고 실행해 본 후보가 요청된다. 성과가 없는 후보는 적합하지 않다.

리더십 전문가 맥스웰의 원리를 적용해 보면, 광주전남의 통합을 이끌 능력, 대한민국 미래산업수도라는 비전, 정부·기업·시민을 설득해 국가 프로젝트와 기업 유지 재정 확보를 이뤄낼 영향력, 대변을 위한 강한 추진력과 인내력,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와 도덕성이 전남광주특별시 리더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반면에 경계하고 배제해야 할 리더도 있다. 도덕성과 신뢰가 없는 후보, 일을 못하거나 성과로 증명하지 못한 리더, 정치적 소나기회주의적 인기연합에 바쁜 후보들이다.

누가 합당한가? 이렇게 정리해 보면 대강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치밀한 후보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인기투표가 아니라, 배심원제 강화가 필요한 이유다. 각 정당은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시민배심원 또는 시민패널제를 대폭 강화해 자질과 정책 검증에 철저히 하고, 이들에게 일정정도 선택권을 주는 것이 당원과 국민경선인이 거의 동일한 광주전남에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좋은 정치와 좋은 리더는 결국 시민들이 만든다. 나쁜 정치인, 실력 없는 리더를 뽑아 놓고 정치 탓, 리더 탓만 하는 시민은 3류 시민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대의 사명에 맞는 리더의 탄생을 기대한다.

社說

전남광주특별시 민주당 후보 경선 파열음 용납 안돼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 출마한 후보들이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을 만나 유권자의 알권리와 경선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민공천배심원제 제검토를 요청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신정훈·이재호·정준호 국회의원은 통합 선거구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방식 등 공정한 관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파악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자질과 정책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일정을 무리하게 서두르지 말고 필요한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관위가 권고한 시민공천배심원에 대해 최고위원회는 “당헌·당규에 있지만 여러 차례 시도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불안정성에 대한 의견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고위는 오는 19·20일 예비경선을 100% 당원 투표로 치른 뒤 8명에서 5명으로 압축한 본경선은 4월 3·5일 당원 50%·국민참여(여론조사) 50%로 진행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시 결선은 12·14일 실시한다. 대체적인 방향이 확정된 바, 구체적인 운영과 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협의해 결정된다.

이재명 정부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의

제1호 모델인 전남광주특별시가 국회 본회의 특별법 통과와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7월 공천의 알권리와 경선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민공천배심원제 제검토를 통해 선출될 초대 통합시장이 누구일지에 시민들은 물론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특히 집권여당 민주당의 강력한 지지 기반이어서 상대적으로 본선 승리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선 방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후보들 입장에서 민감하게 유불리를 따져봐야 한다. 의결권을 갖지 않는 정책배심원 구성과 역할에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어렵게 이뤄낸 통합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주도할 리더를 뽑는 매우 중요한 정치 이벤트다. 그런데 엄정해야 할 선거 룰과 관련해 일부는 환영 입장을 밝히고 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불필요한 파열음을 경계하면서 어느 때보다 엄정하게 경선을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당연하게 시민들의 적극 참여를 위한 실질적인 시스템도 마련돼야 한다. 후보자의 비전과 역량을 충분히 검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속도전으로 성사된 광역 행정통합을 고려해 민심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해 주길 바란다.

남해안 거점 여수·광양항 북극항로 개척의 필요성

중동전쟁으로 인해 석유 해상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북극항로’ 개척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부쩍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전남의 경우도 중국발 공급 과잉 등으로 초래된 광양제철소와 여수석유화학 단지의 위기 국면에서 여수·광양항의 활성화가 시급해졌다. 원료·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물류비 절감 등에 있어 북극항로 선점이 돌파구가 되는 셈이다. 전남도가 에너지 허브 항만 도약, 친환경 병커링 기지 조성, 중대형 수리조선 산업 육성, 배후 물류산업 및 인프라 확충 등을 역점 추진해온 이유다.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최단거리인 북극항로는 기후변화로 해빙 기간이 늘어나 활용 방안이 증대되고 있다. 조선·금융 등 전후방 산업이 동반 성장할 좋은 계기로도 여겨진다. 중국 등 주변국들은 이미 운항을 본격화하는 추세다. 이재명 정부도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비상을 위한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삼고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오는 9월 시범사업을 예정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말 부산청

사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에서 ‘북극항로 시대’의 대도약,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이라는 비전 아래 상임운항을 위한 준비에 착수해 국내 민간 컨테이너선을 투입, 극지운항 경험과 정보를 축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항을 세계 최고의 항만으로 만들어 해양수도권을 조성할 것이라며 야심찬 구상을 드러냈다.

전남의 발걸음도 분주하다. 지난해 10월 북극항로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여수·광양항을 동북아 물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해수부가 전문가 의견 청취 및 민간 협력과제 발굴의 중요성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전략 수립 등 정책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국회에서도 개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고 있다. 북극항로 시대라는 거대한 기회를 마주하고 있다. 100년을 내다보는 미래 먹거리다. 국가적으로 과감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여수·광양항도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 정책적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현장칼럼



정영수

한국산업교육원 광주지부장·경영학박사

부동산시장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침체된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산업이다. 최근 3·4년 동안 지방부동산은 침체기로 거래는 안되고 주택 건설업도 붕괴되고 있어 정부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추가 대책과 관련해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 부동산 취득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난해 6월 27일 규제정책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DSR 3단계 규제해 현금부자만 집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올해 5월 9일에 다주택자중과세를 연기하지 않고 실시한다고 했다. 서울과 수도권 다주택자와 아파트투기 세력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 할 것이다. 그런데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심각한 단계를 넘어 절벽의 단계로 거래가 실종단계에 있다. 최근에 국제적인 경기침체와 함께 인구감소, 공급과잉 효과로 거래가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 최근 지방

죽어가는 ‘지방 부동산’ 살려야 한다

에서 인구가 줄어들어 주거수요도 감소했고 건축비, 인건비가 상승으로 평균 분양가격이 1천500만원~2천만원으로 지방소득으로 구매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수도권 주택 인허가 실적은 8만3천888호로 전년 동기(6만9천467호) 대비 21.7% 증가지만 지방 인허가는 7만733호로 전년 동기(10만2천210호) 대비 30.8% 감소했다. 특히 분양실적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됐다. 올해 수도권 누적 분양 실적은 5만2천925호로, 전년 대비 7.4% 감소했지만 지방은 같은 기간 전년 대비 44.7% 급감한 3만7천702호로 집계됐다. 올해 지방에서는 경기 침체와 미분양 증가 우려로 분양을 연기하는 단지가 속출했다. 미분양 주택은 지방에 78.7%가 쌓여 있고,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의 지방 비중은 83.5%에 달한다. 지방 부동산 침체에는 고금리 장기화라는 거시 환경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금융부담과 규제로 인해 부동산 거래를 위축하게 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주식시장으로 투자자금이탈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침체되고 무너지는 구조가 되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전국적으로 공사 중단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자금 조달이 어려운 지방 중소 도시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이 지연되거나 무기한 중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2월 두 달간 건설사 폐업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 이

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경기 전반의 지지부진한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대표 심리지수인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BSI)는 지난해 평균 51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중소 건설사 뿐만 아니라, 중견 건설 회사들까지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생 산지수는 82.3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로 건설경기가 최악이던 2014년(80.5)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았다. 지난해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전년 대비 16.2% 줄면서 관련 통계 작성시 시작된 2008년 이후 가장 많이 감소했다. 부동산 시장을 전방위로 육죄는 규제 조치에 분양과 착공이 동시에 위축되고, 지방 미분양 증가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경색까지 겹친 결과다.

2026년 지방 부동산시장 전망은 침체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리인하는 될 것으로 보이지만 소폭에 그칠 것이고 보여 전반적인 가격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힘들 것이다. 서울 수도권은 상승기류이지만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상황이 양극화돼 있어 침체된 지방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별도의 정책이 꼭 필요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돈 있는 사람에게 주식시장을 살려 대박만 터트리지 말고 소외되고 침체된 지방의 악성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기관을 통한 미분양 주택 매입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고사위기에 있는 지방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세제 및 금융지원도 함께 마련해 줘야 한다.

독자투고



신학기가 시작되면 아이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기대가 가득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긴장과 불안도 함께 찾아온다.

신학기는 단순한 출발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성장을 책임지는 중요한 출발선이다. 그렇기에 안전하고 활기찬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학교 안전의 기본은 ‘예방’이다.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 강화와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점검은 가장 기본적인 과제다. 특히 어린 학생들은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지역사회의 배려가 필요하다. 관계 기관의 합동

신학기, 안전하고 활기찬 학교들 위한 우리의 약속

점검과 캠페인도 정례화돼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장난이나 다툼이 아니라 한 아이의 인생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는 상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방관하지 않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환경에 대한 대응도 빼놓을 수 없다. 사이버 괴롭힘과 온라인상 갈등은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빠르게 확산된다. 학생들에게 올바른 디지털 윤리 의식을 심어주고, 학부모 대상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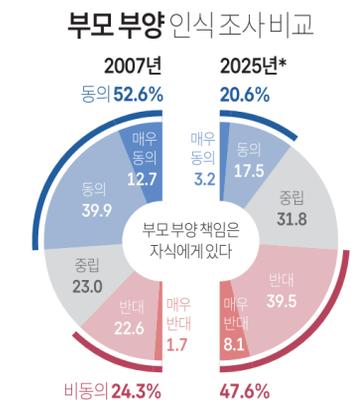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학교는 안전을 넘어 활기찬 배움의 공간이 돼야 한다. 학생 참여 중심의 다양한 체험 활동과 동아리 운영, 또래 간 소통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학교가 즐거운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아이들이 웃으며 등교하고, 안심하며 학교할 수 있는 환경이 곧 지역사회 경쟁력이다.

신학기는 아이들만의 새로운 시작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다짐이 필요한 시기다.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손을 맞잡을 때 비로소 안전하고 활기찬 학교가 완성될 것이다. 아이들의 오늘을 지키는 일이 곧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본다.

〈김훈·영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계〉

* 독자투고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뉴스



9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의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를 모실 책임이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20.6%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총 7천3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응답자들의 인식을 ‘매우 동의함’부터 ‘매우 반대함’까지 5점 척도로 확인한 뒤 이를 재범주화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부모 부양의 자녀 책임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47.6%로 찬성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중립적인 입장은 31.78%였다.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매우 동의한다는 극히 일부분인 3.15%에 불과했다. 반면 반대한다(30.47%)와 매우 반대한다(8.12%)를 합친 반대 여론은 절반에 육박했다. 이런 인식의 변화는 가구의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공통으로 나타났다.

* 2025년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 총 7,300가구 대상
연말뉴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 내 돌봄에 대한 인식 변화는 자녀 양육 분야에서도 감지된다. 자녀를 집에서 어머니가 돌보아 한다는 의견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31.12%를 기록하며 찬성 응답인 33.83%를 근소하게 앞질렀다.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가 거대한 전환점에서 있다고 진단한다. /연말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부회장 馬讚皓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2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로권 월 15,000원 1부 800원